

코로나 극복과 수출 7천억불 시대를 열어가는

「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」

2021. 3. 10.

관계부처 합동

I. 추진 배경

◇ 코로나 위기 이후 글로벌 수요 및 교역 확대에 대비할 시점
→ 수출 5,000억불을 넘어 '7,000억불 시대'를 열어가는 비전 수립

□ 한국 수출은 위기 때마다 진화하면서, 위기극복과 新성장 견인

○ IMF위기('98)와 금융위기('09)를 버텨내고 체질 개선에 성공하며
'06년 수출 3,000억불, '11년 수출 5,000억불(무역 1조불) 달성

* 수출액(억불): ('98)1,323→('04)2,538→('06)3,255→('08)4,220→('09)3,635→('11)5,552

○ 새로운 유망품목과 시장이 부상하며 제1·제2의 수출 반전 주도

IMF 위기	· 자동차 : ('98) 99억불 → ('04) 264억불 → ('06) 327억불
	· 철 강 : ('98) 83억불 → ('04) 134억불 → ('06) 194억불
금융 위기	· 반도체 : ('08) 328억불 → ('09) 311억불 → ('11) 501억불
	· 석유화학 : ('08) 321억불 → ('09) 275억불 → ('11) 456억불

□ '20년 수출은 코로나 위기에서 조기 회복하며 성장잠재력 발현

○ 지난해 하반기(+0.4%)·4분기(+4.2%) 수출 플러스 전환에 성공하여
금년 2월*(+9.5%)까지 4개월 연속 증가

* 특히, 금년 2월은 조업일수 부족(△3일)과 기저효과('20.2월 수출 +3.6%) 극복

○ 특히 주력산업 고도화, 방역·비대면 경제를 활용한 新산업 성장
등 질적 개선이 멈추지 않고 진전

코로나 위기	· 전기·수소차 : ('19) 7.7만대 → ('20) 12.1만대 (57.0%↑)
	· 바이오 : ('19) 91억불 → ('20) 141억불 (진단키트 수출 30억불)

□ 미래 유망품목과 무역구조 혁신을 토대로 제3의 도약 추진

○ 가능성을 보여준 유망품목 중심으로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고,
금융·물류 등 무역지원 인프라를 혁신하여 수출성장 뒷받침

○ 구조적 역량강화로 10년 간 정체 중인 5,000억불 대* 돌파

* 수출액(억불): ('11)5,552→('13)5,596→('15)5,268→('18)6,049→('19)5,422→('20)5,128

Ⅱ. 무역환경 변화 및 대응방향

◇ ① 탄소중립, ② 디지털화, ③ 보호무역 확산 등 글로벌 무역의 구조적 변화요인 대두 → 우리 무역지원 인프라의 선제적 혁신 추진

□ 새로운 무역 기회와 동시에 일상화된 불확실성에 직면

① (新산업) 친환경·비대면*(예: 홈코노미) 등 新성장품목 등장

* '20년 수출증감률(%) : (공기청정기)+21.7, (가공식품)+32.7, (디지털서비스)+8.0 등

② (무역방식) 거래 방식의 온라인화 및 중소기업 수출기회 확대*

* 온라인 수출증감률 : ('19) 43.0%↑ → ('20) 111.5%↑ (중소기업: 165.9%↑)

③ (보호무역 확산) 코로나 장기화에 더해, 글로벌 수입규제 급증*, 미·중 통상갈등 등 불확실성 확대 → 체계적 대응 요구

* 수입규제 신규 조사건수 : ('18) 280 → ('19) 283 → ('20.10월, 29개 주요국) 387

□ 기회 활용 및 위기대응 강화를 위한 무역지원인프라 혁신 필요

① (유망품목) 제품 개발*, 제도 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차세대 유망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→ 글로벌 경쟁력 강화

* 기술 고도화, 친환경 전환, ICT 융합 등 여건을 고려하여 전략적 투자

② (디지털 전환) 무역지원인프라를 디지털 무역체제*로 전환 가속화 → 코로나 상황에도 막힘없는 해외 판로 확보

* 정보제공-온라인 거래-물류-통관 등 소과정 디지털화 및 연계 추진

③ (성장금융) 기업 수요와 성장 잠재력을 고려한 선제적·능동적 무역금융 적극 확대 → 유망기업 글로벌화 촉진

④ (위기대응) 무역 핵심물품의 수급 안정화 및 수입 원활화를 위한 긴급조정 근거 마련 → 튼튼한 무역안전망 구축

Ⅲ. 목표 및 추진전략

비 전

· 미래 유망산업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로
2025년 수출 7,000억불 시대 준비

전 략

· 미래 유망 전략품목 중심으로 新성장동력 확충
· 무역지원인프라 혁신을 통한 수출성장 가속화

추진
과제

① 차세대 유망 전략품목 발굴

· 유망 전략품목 성장기반 마련
· 핵심소재·부품 실증인프라 조성
· 적극적 제도개선
· 전략적 해외마케팅 및 시장진출 촉진

② 서비스 무역 동반성장

· 대외무역법 체계적 보강
· 6대 유망서비스 해외진출 지원
· 범정부 협력체계 강화

③ 무역 디지털 전환 가속화

· 정보 제공의 온라인·현장성 강화
· 디지털 기반 중소·중견 수출 확대
· 디지털 무역 및 통관·물류 고도화

④ 무역금융 구조혁신

· 수요기반 무역보험체계 도입
· 수출 유망기업 투자 활성화
· 금융 디지털화 촉진
· 중소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

⑤ 위기에 강한 무역시스템 구축

· 상생형 물류 확산 등을 통해 수출입물류 수급 대응역량 강화
· 수출 핵심물품 수급, 국내기업·근로자 보호 등 위기대응제도 신설

IV. 중점 추진과제

1. 차세대 유망 전략품목 발굴

◇ ①미래 성장성, ②제품 경쟁력, ③글로벌 트렌드를 종합 고려하여 **유망 전략품목*** 발굴 →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화 촉진

* 바이오, 친환경차, OLED, 첨단기계·장비, 시스템반도체, 산업용섬유, 이차전지, 화장품, 식품 등

① 유망품목의 제품 개발·실증 활성화로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

- 차세대 유망 전략품목의 개발 및 고도화에 **법정부** 약 5조원 투자('21~'25, '21년 1조원) → 미래 **新시장** 창출에 기여
 - 디지털, 탄소중립, K-방역 등 기회 활용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전방산업 수요연계를 통한 완제품·소부장 동반성장
 - 실증인프라 조성으로 핵심 소부장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

* (예) 전기차용 배터리 시험평가센터('23), 플라스틱 대체물질 지원센터('23) 등

[주요 품목별 제품개발 계획(예시)]

유망 품목	주요 내용	투자 계획('21~'25)
바이오헬스	· 혁신신약, 의료기기 개발	· 1.6조원 ('21년 2,355억원)
OLED	· 스트레처블, 롤러블, 폴더블 등 개발	· 3,831억원 ('21년 878억원)
화장품	· 친환경·기능성 화장품 등 개발	· 206억원 ('21년 103억원)

② 기업 친화적 제도개선과 금융 지원으로 기업현장 애로 해소

- R&D·환경·인증 등 제도개편 → 제품경쟁력 강화 및 기업부담 경감
- 민관합동 유망기업 투자재원 확충 → 전략제품 생산·투자 확대

[주요 품목별 제도개선 계획(예시)]

유망 품목	주요 내용	지원 계획
농수산식품	· 「식품안전 국가인증제도」 개발 및 국제인증화 → 인증획득 비용·시간 절감	· 인증제도 신설('21, 식약처) · 국제기구 승인 확보('22)
첨단기계·스마트장비	· 신뢰성 관리 강화 및 실증 중심으로 R&D 체계 개편 → 제품 신뢰성 확보 지원	· 관리체계 개발('22) · 기계·장비 R&D 개편('23)
친환경차	·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는 공장증설 없이도 외부·지투 보조금 지원 추진, 배출가스 진단장치 규정 검토 등 → 원가절감 지원	· 관련법령 등 제도·운영 합리화 (산업·환경부 등)
시스템반도체	· ①시스템반도체 상생 2차 하위펀드, ②반도체성장펀드 M&A전용 하위펀드	· 민간펀드 조성('21) · ①500억원, ②300억원

③ 전략적 해외마케팅 추진을 통한 **新시장** 및 **네트워크** 확대

- 유망기업을 글로벌 기업, 현지 유력유통망과 전략적 매칭 → 제품·기술력으로 대외거래에 성공하도록 시장 진입장벽 완화

[주요 품목별 마케팅 계획(예시)]

전략 품목	주요 내용	지원 계획
친환경차	· 글로벌 친환경차 기업-국내 부품기업 매칭 → GVC 편입 지원	· GP상담회 추진 ('21년 20여회, 300여개사)
화장품	· ①코트라 해외 협력유통망 2배 확대, ②국내 외국인관광객 대상 홍보거점 구축	· '21년 유통망 122개 확보 · 체험·홍보관 신설(9월, 복지부)

2. 서비스 무역 동반성장

◇ 법·제도 기반과 지원시책 보강 → **상품·서비스 수출 동반성장**

① 제조업 수준의 체계적인 지원체제로 서비스 기업 육성

- (해외진출) 「대외무역법」에 서비스무역의 대상을 **소업종으로 확대***하고, 별도 진흥규정 신설('21) → 유망기업 글로벌화
- * (現) 지식서비스 등 제한적 열거(포지티브 방식) → (改)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
- (정책기반) 서비스무역 통계작성, 정책연구 등 **전문기관 지정**('22)

② 6대 K-서비스기업 대상으로 **법정부** 역량을 결집하여 시너지 창출

- (유망서비스) 잠재력 높은 6대 K-서비스* 중심으로 '기업 발굴 및 금융·투자 지원 → 해외시장 진출 확대' 추진
- * 6대 K-서비스 : 콘텐츠, 디지털서비스, 의료헬스케어, 에듀테크, 핀테크, 엔지니어링
- (기업 발굴) 해외시장별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구축('21년 40개사)
- (금융지원) 서비스업 무역금융을 대폭 **강화**('21~'25년 20조원 이상, 수은)하고, 유망 서비스별 **특화 투자 확대***
- * ①콘텐츠 모험투자펀드('21. 1,500억원), ②핀테크 혁신펀드('20. 3,000→'25년 5,000억원) 등
- (해외마케팅) 온라인 전시관 등 플랫폼을 서비스 업종으로 **확산**
- * 「K-서비스 통합 전시관」 신설('21), 「ICT 서비스 플랫폼」에 VR전시관 개설('21, 1천개사) 등
- (추진체계) 관계부처·기관 등 **법정부 협의체 운영 상설화**('21~)

3. 무역 디지털 전환 가속화

◇ 무역지원 인프라를 디지털 체제로 대전환 → 무역 초과점 걸림돌 제거

① 정보 제공의 지능화·현장성 강화로 기업 수출역량 제고

- (지능화) AI·빅데이터를 활용한 「무역투자 24」 구축 → 맞춤형 정보(AI 보고서), 최적의 수출사업 추천 등 기업지원 개시(하반기)
 - (현장성 강화) ①시장별 최신이슈 동영상 제공('21 200→'25 2,000편), ②전문무역상사 지정요건* 완화 → 기업참여 및 中企 수출대행 확대
- * (現) 한국제품 수입실적 100만불 이상 → (改) 한국제품 교역실적 100만불 이상 (해외기업 대상)

② 디지털 기반 마케팅 강화를 통한 중소·중견 수출기회 확대

- (디지털 콘텐츠) 유망거점(예: 베트남) 중심으로 K-Studio 2배 확대* ('21년 20개소) → 콘텐츠 제작, 라이브커머스 등 지원(200회 이상)
 - (온라인 수출) 3대 B2B 플랫폼(코트라·중진공·무협) 상품 동시검색 등 통합서비스 개시(상반기), 유망 테마·기업별 전용관* 30개 구축(연내)
- * 디지털 브랜드관, 'B2B 라이브커머스관', 'UN혁신제품 조달관', '내수기업 전용관' 등
- (기업별 특화지원) 수출기업 성장단계와 업종·시장상황에 맞춰, 온·오프라인 방식을 융합한 수출지원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

소상공인	· 「소상공인 수출지원센터」 신설(3월, 코트라) → 500개社 맞춤형 지원
중소기업	· 코트라 해외협력유통망 2배 이상 확대('21. 122개) → '1무역관 1유통망 체제' 구축('21)
소부장·뿌리기업	· 「온라인GP 전용관」 구축(상반기) → 글로벌 매칭 및 비대면 실사 지원
	* 반도체·미래차 등 첨단 분야 GP센터 확충(現 7개 → '21년 10개)

③ 디지털 무역 제도화, 통관·물류 고도화를 통한 무역시스템 개편

- (제도 개편) 무역기본법인 대외무역법에 정의된 무역의 범주에 '디지털 무역*' 전면 반영('21) → 제도적 근거 마련
- * (現) 전자무역(인프라) 중심 → (改) 전자상거래, 디지털 재화·서비스 교역 등 추가
- (통관·물류 고도화) 전자상거래 수출신고, 관·부가세 환급 등을 단일 포털에서 처리하는 전용 통관정보망 구축 추진('21~)

- 빅데이터, 자동식별장치(AIS) 등을 활용해 최적 물류기업 제시, 화물 실시간 추적범위 확대* 등 물류지원 서비스 개선('21)

* (GPS-AIS 연계) (現)내륙운송~선적 → (改) 선적 후 해상운송까지 실시간 추적

4. 무역금융 구조 혁신

◇ 수요맞춤형 지원, 펀드 조성, 디지털화 등 혁신 → '성장금융' 확충

① 수요맞춤형 상품 제공 등 수요기반 무역보험 체계 도입

- (금융 전략) 무역거래 유형 등 기능별 지원체계를 개편하여, 기업 수요를 감안한 최적의 금융전략* 수립('21)
- * 무역보험공사 - 업종별 협·단체 간 TF 구성·운영 → 세부전략 및 운영계획 수립
- * (예) 미래차·바이오 의약품 등에 단기 수출보험 우대(보험한도 확대, 부보율 상향 등)
- (기금재원 다양화) 업종별 협·단체의 무보기금 출연 허용(무보험 개정 추진) → 기업수요를 반영한 수요맞춤형 상품 도입('21)

② 수출 유망기업 육성 및 적극적 리스크 대응으로 무역보험 활성화

- (민간펀드 활성화) 유망기업을 지원하는 「수출혁신 펀드」를 조성(1,500억원, 무협)하고, 펀드 투자대상에 무역보험 연계 지원('21~)
 - (정책금융기관 협업) 무보·他금융기관이 연계, 성장성 높은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및 투자·대출 등 종합 금융지원 강화
 - (리스크 대응강화)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해외 대규모 사업에 대해 기업 매각협상 등 상황별 대외협상력 강화* 추진('21~)
- * (예) 경영악화, 유가/환율변동 등에 따른 우리기업·他채권단 간 공동대응 방안 수립 등

③ 핀테크 기술 등을 활용한 금융 디지털화로 기업 거래부담 경감

- (실시간 보험가입) 수출신고와 함께 가입이 가능한 '다이렉트 보험 상품' 출시·운용('21~)
- (무역정보 제공) 대외거래의 핵심 정보인 수입자 정보에 대해, 수출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한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('21)

④ 중소기업 애로 해결을 통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

- (채권회수 지원강화) 중소기업의 채권에 대해, 해외추심기관 등을 활용한 회수대행 + 추심비용 일부를 지원*하는 서비스 출시(하반기)
- * 자금 건전성을 감안하여,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추심비용 우선 지원
- (금융비용 경감) '수출예비→실적창출→주력기업' 등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보증료 감면 및 보증비율 상향 조정(상반기)

5. 위기에 강한 무역시스템 구축

◇ 물류·핵심물품 수급 안정성 강화 → 체계적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

① 상생형 물류 확산, 조정체계 구축을 통한 물류수급 대응역량 강화

- (상생형계약 확산)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선·화주, 물류업체가 모두 참여하여 '상생형 표준거래 계약서' 마련·보급('21~)
- 중장기 계약 확산과 기존 거래관행 개선*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화를 통해 선·화주-물류업체의 선순환적 성장 기반 조성
- * 수출입물류 계약조건을 국적선사 활용 및 국내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
- (조정체계 구축) 수출입물류 현안에 대한 체계적 대응·조정을 위해 민관합동 「수출입물류 상생협의체」 구성(상반기)

② 법·제도 보강을 통한 신속한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

- (수급대응) ①물류 수급, ②생산 핵심물품 조달 등에 위기발생 시 정부의 긴급조치 및 지원 근거 신설('21, 대외무역법 개정)
- * (예: 생산위기) 생산 방역물품, 핵심 소부장 등에 대한 수입·조달 지원활동 등
- (방역대응) 기업인 출입국 편의 제고*를 통한 무역활동 지원 강화
- * 2분기부터 중요 경제활동을 위한 단기 국외방문 기업인의 경우 소관부처 심사 및 질병관리청 승인을 거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지원
- (통상피해) 코로나 등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은 국내기업·근로자 보호를 위해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*('21, FTA조정법 개정)
- * ①(지원범위 확대) FTA피해→통상피해, ②(지원내용 보강) 고용유지·판로 지원 등 추가

V. 5년 뒤의 모습

① 기업의 노력과 혁신으로 수출 7,000억불을 달성합니다. 지난 10년의 정체를 극복하고 한국 무역이 다시 도약합니다.

- 미래 유망 산업·품목을 중심으로 기업과 수출이 성장하며 '수출 5천억불'의 벽 돌파 → 제3의 수출 도약
- 한국 무역의 위기극복 DNA, 수출이 견인하는 경제발전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발현 → 무역 강국의 위상 강화

② 더 많은 기업의, 보다 성공적인 수출기회가 창출됩니다. 자금, 인력과 네트워크가 부족해도 수출시장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.

- 우리 무역금융을 성장금융 중심으로 전환하여 유망기업 지원 강화 → 성과 창출에 필요한 유동성 확보
- 디지털 무역체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해외시장에 도전 → '수출기업 10만개'의 벽 돌파

③ 무역위기가 발생해도 수출기업에게 방파제가 생깁니다. 선·화주가 상생하고, 생산현장 리스크가 최소화됩니다.

- 장기 운송계약 등 새로운 물류생태계가 도입되고 선·화주, 정부가 함께 소통·조정하며 문제 해결 → 동반성장 실현
- 방역물품과 핵심 소재·부품·장비 수급 원활화에 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대응 → 기업 생산 활동과 공급망 보호